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 200명으로 확대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최종 의결 공직선거법 개정 따라... 전주·군산 등 6개 시군에 변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영기, 이하 획정위)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제9회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로써 조례 개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행된다.

획정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지난 1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대비 2명이 늘어난 200명(지역구 175명, 비례 25명)으로 결정됐다. 인구·읍면동 수와 도의원 정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전주시와 군산시의 기초의원들을 각각 1명씩 증원했다.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이 불

가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편됐다. 그 결과 도내 6개 시군에서 변경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시군은 제8회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주시는 인구 비중을 반영해 1명 증원된 38명(지역구 32명·비례 4명)으로 확정됐다. 도의원 선거구 변동에 따라 중앙동·풍남동·인후동·인후2동 등 9개 동의 선거구가 조정됐으며, 5개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가 변동됐다.

군산시는 인구 및 읍면동 수를 반영해 1명 증원된 24명(지역구 21명·비례 3명)으로 결정됐다. 신흥동·중앙동 등 7개 동의 선거구가 조정됐고, 도의원 제5선거구 신설에 따라 인구밀집 지역인 내문2동과 내문동을 통합한 '아' 선거구 재편 등 3개 선거구에

서 의원 정수가 변동됐다.

익산시 의원 정수는 25명(지역구 22명·비례 3명)으로 유지됐다. 도의원 제8선거구 신설에 맞춰 인구가 밀집된 모현동과 남중동을 묶은 기초의원 '자' 선거구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전체 9개 선거구 중 7개가 조정되고 4개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 변동이 발생했다.

정읍시 의원 정수는 17명(지역구 15명·비례 2명)으로 변동이 없다. 다만, 내장상동이 포함된 '바' 선거구는 상한 인구를 초과함에 따라 의원 정수를 1명 늘렸지만 '가' 선거구는 1명 감원됐다.

김제시 의원 정수도 14명(지역구 12명·비례 2명)으로 종전과 같다. 그러나 도의원 제1선거구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인' 선거구 3개소('가', '나', '다')에서 '3인' 선거구 2개소 '체'제로 전환된다.

완주군도 의원 정수는 11명(지역구 9명·비례 2명)으로 변동이 없다. 반면

기존 '가' 선거구인 삼례읍·이서면의 인구 증가로 상한 인구를 초과하게 되자, 획정위는 인접한 '나' 선거구와 통합해 4인 선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김영기 위원장은 "변화하는 지역 인구 구조와 선거구 환경에 발맞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합리적인 획정안을 도출하고자 했다"며 "제9회 지방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 관계자는 획정안이 도지사에게 제출돼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30일까지 조례(안)이 의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박예고 등의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도의회에 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조속 제정을”

전북 장애인단체, 차별버스 OUT 집회 “차별 없는 이동권은 기본권” 목소리

전북지역 장애인단체들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 행동을 나섰다. 이동권을 단순한 편의가 아닌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구조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지부는 지난 24일 전주시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차별 버스 OUT 전북행동' 2차 집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차 행동에 이어 다시 거리로 나서며 입법 지연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단체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저상버스 도입 의무 확대와 장애인 톨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국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로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지 체 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동권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는 "입법 책임이 있는 국회가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더 이상의 지연은 교통약자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북지역의 교통 현실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약 31%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와 노약자 등이 쉽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량이다. 이동권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더 큰 문제는 저상버스 도입이 제외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지부는 지난 24일 전주시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차별 버스 OUT 전북행동' 2차 집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되는 '예외노선' 비율이다. 전국 평균이 약 11% 수준인 데 비해 전북은 31%를 넘어선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로 여건이나 수익성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 투입이 제한된 노선이 많다는 의미로,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이동 기회를 더욱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체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미흡한 제도 운영과 예산 부족을 꼽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예외노선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

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예산 편성이 뒤따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예외노선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 설정과 단계적 도입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집단의 불편을 넘어 사회 전반의 평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사회는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다"며 "이동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에도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거리 집회와 시민 참여 캠페인, 국회 압박 활동 등을 통해 여론을 확산시키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단체는 "차별 없는 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상 기자

“교육격차 해소·보육환경 개선”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 강경숙 혁신당 의원과 간담회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조국혁신당으로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임형택 후보가 같은 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과 함께 지역 교육·보육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장인 강 의원은 24일 익산을 방문해 임 후보와 동행 초등학교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격차 해소와 보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고교 내신 5등급제 개편에 따른 지방 학생 불이익 우려를 비롯해 소규모 학교 교육 여건 악화, 인성교육 강화 필요성, 신학기 교사들의 심리 부담 해소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지역이동센터 운영 내실화, 생활밀착형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익산 서부권 수영장 건립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 교육·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어린이집 연합회는 보육교직원 근로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임 후보는 "현장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강 의원은 "교육·보육 정책에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불법비리, 이번 기회에 뿌리뽑자”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 불법비리 척결운동 선포식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조국혁신당)는 지난 24일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과 당 핵심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예산 오·남용 및 불법비리 척결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유 예비후보는 "불법비리, 특히 지방정부 예산 오남용 사태를 이번 기회에 군민들의 손으로 뿌리뽑자"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또한 불법 비리와 선거 부정 사례 근절을 위해 △지방정부 부조리 및 예산·군유재산 등 재정운용 오남용 의혹 △예산 지원사업 배제 및 편중 지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사례 △관변단체 역암 및 행정시비와 문제 △공무원·이정당·관변·자생·복지단체 등 예산 지원단체 관계자도 후보 지원



행위 등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8월 3일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강경숙 의원은 "지방정부의 불법행위와 예산 오·남용을 조사할 중앙부처의 상설기구 설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고창군 내 통일교 계열사 모나윙(주)과의 계약 문제는 대표적일 조사대상 사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정부 예산 오·남용 및 불법비리 신고는 방문 또는 전화(063-562-0603)를 통해 가능하며, 고창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의전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 지사 “공공의료 새 전기 마련”

남원 유치 통해 국민건강 증진 기여 입증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국립의전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남원 유치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입정문을 통해 "23일 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된 것은 전북도민과 함께 8년 넘게 노력해 온 결실이자,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북은 농어촌 지역이 많고 의료 취약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음에도 의료 인력 부족으로 필수 의료 공백이 지속돼 왔다"며 "공중보건의 감소와 지방의료원 인력난이 겹치며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법 통과를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김 지사는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이 될 것"이라며 "학생 선발부터 교육, 배치 등 국가가 책임지고 입학금과 등록금, 기숙사비 등 교육비 전액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

또 "졸업생은 15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게 돼 의료취약지와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 의료 수요를 반영해 전문과목을 지정할 수 있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법을 목표로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법 시행 이후 설치될 설립 준비위원회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 남원이 최적 입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다"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지 확보, 실시계획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조기 착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겠다"며 "국립의전원이 전북에 설립되면 의료취약지 해소는 물론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방의료원이 교육과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발전해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우수 의료진 유입과 최신 의료기술 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민들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도당 “공공의료 강화 이끈 결실”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 강화 제도 실효성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지난 24일 입정문을 통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를 공공의료 강화에 위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도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지난 8년간 전북도민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국가 책임 하에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지역에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제정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공공의료로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당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단

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모델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남대 폐교 이후 장기간 공백 상태였던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 복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당은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가결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24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오명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일제 강점기 농촌 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화호리 용서마을 일원을 환경정비과 포토존 설치 등을 통해 교육과 관광이 어우러진 역사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심의는 2026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재기) 소관으로 '정읍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가결했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가결했으며,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재) 소관으로 이도형 의원 발의한 '정읍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기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가결했다.

이어 시하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부대 지역에 형성된 방제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방제 조치와 공동 협력 체계 및 책임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군부대 대응체계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